



OECD 국가와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 현황과 시사점

SUMMARY

❖ 한국은 국가 혁신역량에 비해 인적자원 경쟁력이 낮음

* 블룸버그 혁신지수(2021): 한국 종합 1위, 그러나 인적자원 경쟁력은 낮음(고등교육 효율성 13위, 생산성 36위)

❖ 2021년 세계 인적자원경쟁력 지수(GTCI)* OECD 38개국 중 24위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인재 유입

• 고등교육 해외 유입률
37개국 중 **33위**
• 고숙련 일자리 여성 비중
37개국 중 **27위**

인재의 성장

• 고등교육 인당 정부지출
37개국 중 **31위**
• 근로자 역량개발
38개국 중 **23위**

인적자본 혁신 성과

• 스킬-직업 미스매치
30개국 중 **30위**
• 노동생산성
38개국 중 **22위**

❖ 한국은 혁신을 위한 재교육, Up-skilling보다 직접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경향

➔ AI등 기술발전과 코로나19로 디지털전환 가속화되는 변화의 시기에 인적자원 혁신 위한 정책 있어야

한국 인적자원 혁신 현황

🇰🇷 한국,
국가 혁신역량 높지만
'인재혁신' 역량 낮아

❖ 한국은 국가 혁신역량에 비해 인적자원 경쟁력이 약함

* 블룸버그 혁신지수(2021) 한국 종합 순위(1위) but 생산성(36위), 고등교육 효율성(13위)

* 2018년 이후 국가경쟁력(IMD)은 상승하나, 교육경쟁력은 하락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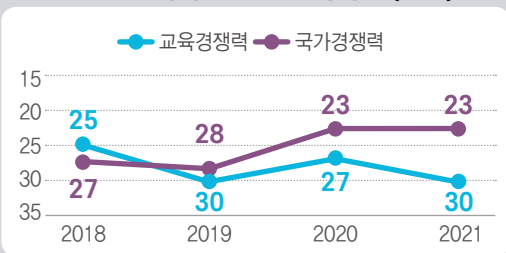
블룸버그 혁신지수 항목별 순위

	한국	싱가포르	스위스
종합순위	1위	2위	3위
제조업 부가가치	2위	3위	5위
첨단기술 집중도	4위	1위	1위
고등교육 효율성* (Tertiary Efficiency)	13위	1위	15위
생산성**	36위	6위	7위

* 고등학교 졸업자중 대학진학률, 노동인구중 대학 학위소지자 비율, 연간 대학졸업자중 이공계 비중 등

** 15세 이상 노동인구당 GDP 규모(최근 3년 개선 추이 포함)

한국 교육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순위)



* 출처: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 연도)

2021년 세계 인적자원경쟁력지수(GTCI)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 한국 글로벌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 134개국 중 27위, OECD 38개국 중 24위로 중하위 수준

❖ 투입요인 중 '매력도(33위)', '성장성(25위)' 낮고, 산출요인 중 '직업기술(28위)' 낮음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 OECD Top 7 vs 한국

스위스	미국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룩셈부르크	한국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24위

	평가 기준	한국순위	세부지표(총 68개)
투입(Input) 요인	실현 여건(Enable)	22	사업용이성, 정치적 안정성, R&D 지출 등
	매력도(Attract)	33	개방성(인재유입, 해외유학생 등), 여성인력 비중 등
	성장성(Grow)	25	직업교육, 고등교육 지출, 대학 순위, 역량개발 등
	지속성(Retain)	24	연금 등 사회적 보장, 고급인력 유지, 치안 등
산출(Output) 요인	직업/기술 역량(VT Skills)	28	노동생산성, 직업역량 매칭,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등
	글로벌 지식(GK Skills)	19	연구원(과학자) 수 등 고등교육 인력, 신사업 활동성 등

평가기관 2013년부터 유럽경영대학원(EQUIS)이 ILO, WEF, UNESCO 자료를 토대로 국가별 인적자원 경쟁력을 평가 (2021년 엑센추어, 포르투갈스 인스티튜트 공동발간)

평가항목 인적자본 혁신[투입]과 그 결과인[산출] 총 6개 부문 68개 세부 지표

🌐 글로벌
인적자원경쟁력 지수

• 한국 134개국 중 **27위**

• OECD 38개국 중 **2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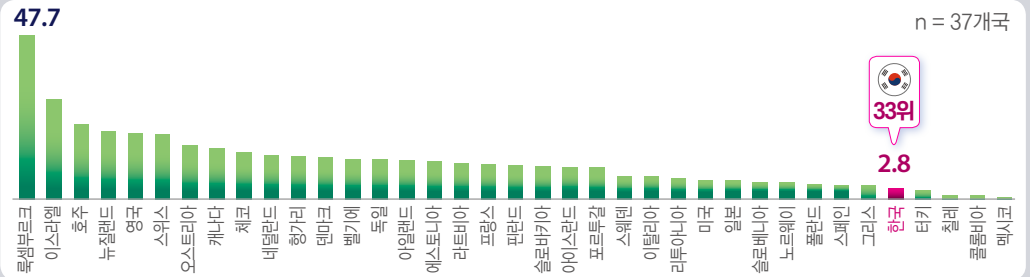
GTCI 세부지표별 한국 인적자원 경쟁력

1 인재유입(Attract)

- 해외 우수 인적자원, 여성 고급인력 등 인재 유입과 활용도 낮음

- ❖고등교육* 외국인 유입률 OECD 37개국 중 33위(2.8%), OECD 국가 중 개방성 낮음
*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 직업학교, 전문대학, 대학 등 중등교육 이후 교육과정
- ❖고숙련 일자리(관리자, 전문직, 기술자 등) 중 여성 근로자 비율 OECD 37개국 중 27위

고등교육 해외 유입률(%)



* Tertiary inbound mobility ratio(%), UNESCO, 2019

2 인재성장(Growth)

- 고등교육 투자, 직업 인재 양성 저조

* 성장성 지표
교육(직업교육, 능력개발),
직업역량, 성장가능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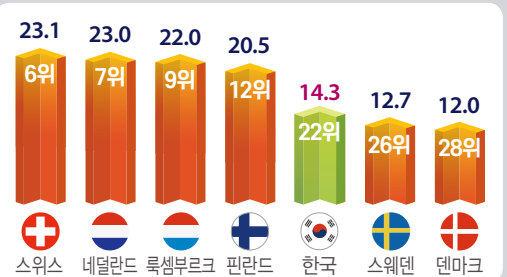
- ❖한국 고등교육 인당 정부지출 37개국 중 31위(5,773달러), 직업교육 등록률 34개국 중 22위(14.3%)

고등교육 인당 정부지출(달러)



※그래프 안 순위는 OECD 국가(37개국) 중 순위
※인적자원 경쟁력 Top7 국가와 한국 비교
※Initial government funding per tertiary student (PPP 불변가격, 2019), UNESCO, 2019

15-24세 직업교육 등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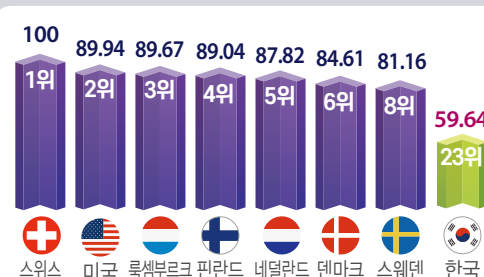


※그래프 안 순위는 OECD 국가(34개국) 중 순위
※인적자원 경쟁력 Top7 국가와 한국 비교
※중등교육 과정 중 직업교육 등록 학생 비율(%), UNESCO, 2020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부진하고, 교육과 실제 경제 시스템 간 연계성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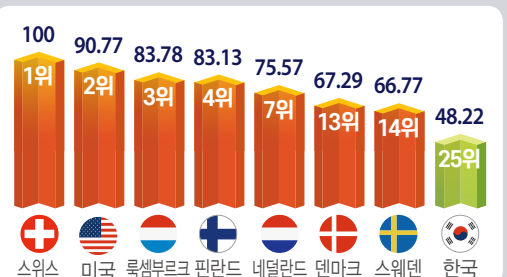
- ❖한국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정도 평가 OECD 38개국 중 23위(59.6)
- ❖교육과 경제 시스템의 연계 정도도 낮아(38개국 중 25위) 실제 필요한 교육과의 괴리

근로자 역량 개발 (점수)



※그래프 안 순위는 OECD 국가(38개국) 중 순위 / 인적자원 경쟁력 Top7 국가와 한국 비교 / 평가점수(1위=100점) 환산
※[역량개발]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정도 평가 (1=매우낮음, 7=최대)
※[교육-경제시스템 연계] 자국 교육시스템이 해당 국가의 경제적 필요성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1=매우낮음, 7=최대)
※WEF Executive Opinion Survey, 2020

교육-경제시스템 연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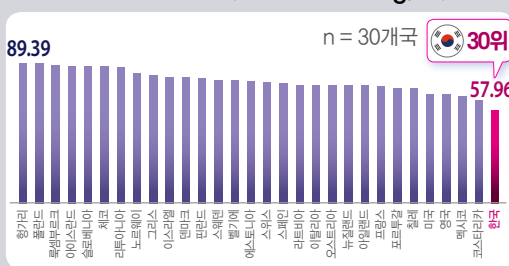


3 직업 & 기술적 스킬 (Vocational and Technical Skills)

- 교육-직업 미스매칭, 낮은 노동생산성 등 결과로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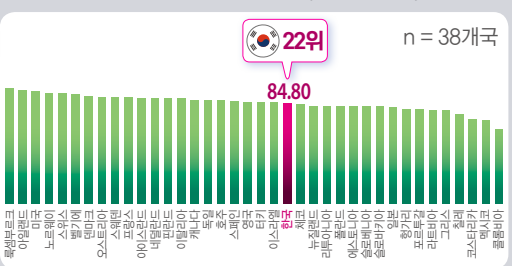
- ❖교육과 실제 직업의 매칭 정도(%) OECD 30개국 중 30위로 최하위(한국=57.96)
- ❖노동생산성 OECD 38개국 중 22위 수준(1위국 룩셈부르크=100, 한국=84.8)

스킬 매칭 정도(Skills Matching, %)



* OECD 국가 중 데이터가 있는 30개국 기준
* Workers whose education matches their occupation(%), 2020, ILOSTAT

근로자당 노동생산성(US\$ PPP)



* Labour productivity per employee, 2020 US\$ PPP

인적자원 혁신국가와 시사점

인적자본 혁신국가

-  우수 인재 적극 유입
-  민·관·학 협력으로
직업교육 질 제고
-  실질적 직업역량 개발
주력

국가	인적자원 혁신국가 사례와 한국 시사점
인재유입  미국	■ 바이든 정부 출범후 STEM(과학기술) 분야 등 '세계 우수인력 유치' 정책 강화,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H-1B) 요건 완화 등 추진 ■ 기술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유로운 교육정책으로 인재유입 조건 확충 * 美 스탠포드대학 컴퓨터공학과 입학 정원 '08년 141명 → '20년 745명 ➔ 고급인력 유치 비자제도 개선, 한국 대학 입학정원제 완화 등 시장 자율적 환경 필요
직업교육 활성화  스위스	■ 직업교육 전문 전담기관(스위스 직업훈련개발원 SFIVET 등), 정부, 기업 간 밀접한 협력 ■ 직업학교 교사를 위한 전문교육(석사과정), 160개 파트너기업이 참여한 훈련센터 등 * 기업참여형 철저한 현장실습, 도제식 직업교육으로 직업교육의 질 제고 ➔ 한국 기업참여형 현장실습 위주 직업교육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 제고 필요 * 직업계 고교 취업률(%): ('17) 53.6 → ('18) 44.9 → ('19) 34.8
직업역량 개발  핀란드	■ 핀란드 혁신기금(Sitra) 운영 '국가 예측 네트워크(National Foresight Network)'에서 향후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술(Skills) 전망 예측해 정책 반영 ■ '노키아 몰락' 쇼크 이후 '브릿지 프로그램(전직을 위한 직업재교육)' 시행, 퇴직인력 기술력과 아이디어 활용해 스타트업 강국으로 재기 성공 ➔ 한국 실직자 재교육, 현직 근로자 직무교육, 직업전환 등 실질적 역량 개발에 주력할 필요

IMF, "코로나 팬데믹 후 급변한 환경에서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동정책 혁신 중요" 언급 (2021.3)

❖코로나 이후 인적자본의 큰 변환이 예상되며, 일자리정책 혁신이 중요해짐

- 1 뉴 노멀(원격근무 등 새로운 근로양상, 전문성·활동분야 따른 근로자간 차이 심화)
- 2 성장과 고용의 불합치(경제회복 속도와 고용회복의 속도가 다름)
- 3 미래지향적 인적자원(AI, 자동화 등 기술과 산업혁신에 부합하는 역량 강화 필요)

❖그러나 현재 한국은 인적자본 개발/혁신에 투자하기보다 직접 일자리 창출에 집중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직업훈련' 재원 비중(%), 한국 OECD(0.11) 대비 절반 수준(0.06)
* 반면 '직접일자리 창출' 비중(%)은 OECD(0.05) 대비 3배(0.15)

- 직접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된 자원을 인적자본 개발에 투입해야 할 시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지출(GDP대비, %)

국가	직업훈련	공공고용서비스 및 행정	직업일자리창출
 덴마크	0.39	0.38	없거나 0.005 미만
 핀란드	0.38	0.15	0.2
 룩셈부르크	0.18	0.06	0.11
 스위스	0.16	0.11	없거나 0.005 미만
 스웨덴	0.1	0.28	없거나 0.005 미만
 네덜란드	0.06	0.2	0.01
 한국	0.06	0.05	0.15
 미국	0.03	0.02	없거나 0.005 미만
OECD 국가 평균	0.11	0.12	0.05

* OECD Public expenditure and participant stocks on LMP(2018 기준)

OECD 노동시장정책 분류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직업훈련(실업자 재교육 등), 공공 고용서비스(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 고용관련 공공서비스), 고용보조금, 직접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참여 중시 정책
-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 중 소득보전, 실업급여, 조기퇴직 보조 등

쟁점과 체크포인트

디지털화, 원격근무 등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환경에 맞는 인적자원 혁신 정책 필요

- ✓ 시장자율적 교육환경, 비자제도 개선 및 해외 우수인재 혜택 강화로 인재유입 촉진
- ✓ 현장중심 직업교육 강화, 직업교육 전문성 강화 등 내실 키워야
- ✓ 공공일자리 만들기 등에 집중된 일자리 재원 → 장기적 효과 큰 분야로 재조정

■ 내용문의: 미구주협력팀 이소원 팀장(02-3771-0377), 이지윤 책임연구원(0187) jiyun.lee@fki.or.kr



글로벌 싱크탱크 FOCU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Biden's Grand China Strategy: Eloquent but Inadequate

바이든의 야심찬 중국전략:
거창하지만 적절치 않다

Ian Johnson
2022. 5. 27.



<https://www.cfr.org/in-brief/biden-china-blinken-speech-policy-grand-strategy>

SUMMARY

새롭게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엔 새로운 내용이 없으며, 양국이 직면한 주요 현안들은 소홀히 다뤄지고 있음

*1년간 對中 관세 부과, 학술 및 인적교류 중단 등 전임 트럼프행정부와 비슷한 대중정책 구사

➔ 이는 대중 강경 태도에 대한 워싱턴 내 공감대 반영했으나, 대만 등 중요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혼란도 반영된 것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전략 핵심(5.26, 블링컨 국무장관)

미국내 투자 + 동맹국과의 협력 = 중국과의 경쟁

- 중국과 경쟁을 위해 미국 내 첨단기술 및 미래산업에 투자할 중국 외 투자자에 초점
 - 권위주의적 중개발방식에 반하는 동맹과의 협력강화 목적 예) IPEF, 오키우스(AUKUS), 쿼드 확대
 - 중국의 급부상을 가능케 한 규칙기반 국제질서는 유지하되, 앞선 두 가지를 결합하여 중국과의 경쟁을 모색 예) 미국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대안을 개발도상국에 제시 것
- ➔ 문제는 민주당의 패배가 예상되는 중간선거로 신규투자 동력이 떨어질 것

매우 좁은 의미에서 미-중 협력의 여지

- 기후변화, 코로나19, 핵 확산, 글로벌 식량위기 등 뻗은 분야에서의 미-중 협력 언급
- ➔ 문제는 대중국 관세 부과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내 의견조율 부족
- * USTR - 관세 유지 선호, 美 재무부 - 반대

세계는 중국 대신 미국을 선택할 것인가?

-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중국 정부체제를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라 천명하고 중국을 인정하지만,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 행정부 내 서로 다른 입장 차 노출
- ➔ 결국 미국은 美, 中 사이 여타 국가들의 선택을 존중할 수 밖에 없을 것



Biden Administration Tacitly Admits Buy America Requirements Are Hindering Efforts to Improve Infrastructure

바이든 행정부,
바이아메리카 조항이
美 인프라 개선을 저해하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

Colin Grabow
2022. 5. 25.



<https://www.cato.org/blog/buy-america-requirements-already-proving-hindrance-improving-infrastructure>

SUMMARY

美 교통부, 5월 중 시행 예정이었던 미국재건과 미국산 우선구매를 골자로 한 보호주의 정책(BABA)*의 미국산 건설자재 의무사용 규제를 180일 동안 유예할 것이라고 발표

*Build America, Buy America ACT (BABA, 미국 건설, 미국산 구매 법안): 연방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철, 철강, 건설자재, 제조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

➔ 최근 美 정부의 정책방향은 미국 인프라 개선 관련 시행되었던 일련의 보호주의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시인하고 있음

이번 유예정책과 관련해 교통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본 유예정책에 대하여 업계는 대체로 지지를 표명한 반면, 특정 제조업체 및 노동단체는 반대
실제로 미국의 주요 관련 단체들은 180일 유예조치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함

사례1) 美 고속도로·교통 공무원 협회(America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

-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이 BABA 요구사항을 수용 및 현실화하기 위해 최소 12개월 소요
- 건설업체와 공급망에서 미국산 건설자재 생산 공급원을 마련하는 데 최소 24개월 소요

사례2) 미국 대중교통 협회(American Public Transportation Association)

- BABA에서 규정하는 새로운 규칙과 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4년간의 유예기간 요구

Build America, Buy America(BABA) 정책은 자멸적인 정책이며, 이번 180일 유예조치는 관련 정책 폐지의 서막이 되어야 할 것